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3.(수) 11:00 < 8.4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8. 3.(수)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민우 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 유상원 (044-203-4203)

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 8.4일 시행

- 9~10월 중 제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-
-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·인력 지원 강화 -

□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**8.4일 본격 시행**된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동 법에 따라 **9~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***하고,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**지정 절차·요건 등을 고시**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·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
* 관계부처 및 기업 신청 → 기술조정委 사전검토 → 국가첨단전략산업委 심의·의결

□ 동 법이 시행되면 **특화단지 지정, 기반시설 지원, 핵심규제 완화**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**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**된다.

○ 국가첨단전략산업 **특화단지 지정***을 통해 관련 **인허가, 기반시설**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.

<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>

구분	지원내용
인허가 지원	「산업입지법」, 「산업집적법」 등의 **인허가 의제사항**을 **45~90일*內 처리**
기반시설 구축비 지원	**도로, 가스·용수·전기·집단에너지공급시설, 폐기물·폐수처리시설, 통신시설, 특화단지 공동구**(共同構),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**장비·설비 등** ⇒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**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**

* 15일내 처리계획 회신 - 30일內 처리 (각각 1회씩 기간연장 가능)

※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여부는 각 특화단지마다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

○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**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**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제적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.

□ **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**과 **기술개발 우선지원**의 근거가 마련된다.

○ **전략산업 특성화대학(원) 지정***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관련 학과의 **정원 확대도 검토한다.**

○ **계약학과**에 대해 **산업체 부담금** 및 **학생 등록금**의 일부를 지원한다.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**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**을 **우선적으로 편성**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□ **전략산업 정책**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**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**(이하 "국첨위")**」를 구성**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**9~10월 중 제1차 위원회**를 개최할 계획이다.

<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(안) >

▸(위원) ▴정부 : 총리, 산업·기재·교육·과기·국토·환경·중기·외교부장관, 금융위원장, 국정원장 등
▴민간 : 총리가 위촉하는 위원

▸(안건)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,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(원) 추진계획 등

○ 산업부는 법 시행 후 **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**을 위한 **수요조사를 1~2주간 진행**할 예정이며, **제1차 국첨위**에서는 국제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**신속히 지정할 필요**가 있는 기술을 **우선 지정**하고,

- **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**를 통해 기술을 **추가 지정할 계획**이다.

<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계획 >

▸(**조사기간**) '22. 8. 8일 ~ 8. 18일, ▸(**신청대상**) 기업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
▸(**접수방법**)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후 **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에 제출**

▸(**신청양식**) **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홈페이지 내려받기** 또는 **업종별 협단체에 문의**

○ 전략산업 **특화단지** 및 **특성화대학(원)**은 10~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**'22.12월~ '23.1월** 중 **지정**할 계획이다.

□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“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**국제적 주도권 다툼**은 각 국의 **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**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”면서,

○ “우리 정부도 **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**을 통해 기업과 **공동 대응을 강화**하고, 「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」, 「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」 등 **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